

“광주·전남 행정통합시 지역편중·사업차질 우려된다”

전남도, 장성군민 대상 두 번째 공청회

행정통합 논의 도민 참여 중심 이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 통합 시 지역 편중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는 2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성군에서 두 번째 도민공청회를 개최, 행정통합 논의를 지역 도민 참여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군 도민공청회에 이어 진행된 이번 도민공청회에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주요 특례 사항, 통합으로 인해 달라지는 삶 등을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통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해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 교육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를 설명한 뒤 학생·학부모·교원 등 참석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서삼초등학교 심명자 교장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장성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학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정원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시설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도 있었다.

삼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이모 씨는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인 전남 1호 데이터센터가 현재 남면에 지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통합하게 되면 이를 다른 지역에 빼앗긴다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영암에 이어 장성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한중 장성군수 등 도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직접 듣고 있다”며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군 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균형발전형 행정통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은 심비혈관 질환 중심의 의

료·바이오 산업, AI 데이터센터 기반 첨단 산업, 아열대 스마트 농업지구 조성과 수출 전문단지 지정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차분히 준비한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이러한 전략 산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장성이

전남 북부권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1일 목포와 신안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남은 20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도민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통합에 관심 있는 도민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누리(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공무원 80% “시·도 행정통합 부정적”

시 공무원노조 인식조사결과
근무환경 영향·고용 안정 우려
도 공무원 설문결과 오늘 발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 공무원 대부분은 근무지 이동 등 근무 환경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행정통합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7%가 통합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1.9%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긍정적이라는 답은 9.4% (긍정적 5.7%, 매우 긍정적 3.7%)에 불과했으며 보통은 10%였다.

노조는 지난 16~19일 전체 2585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 중 958명이 참여했다. 77.8%는 통합이 근무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봤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근무지 이동

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인사·보수 체계, 조직 개편, 고용 안정성, 직무 변경을 우려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73%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으로도 근무지 유지 및 이동제한을 가장 많이 꼽아, 근무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공정한 인사를 가장 많이 들었고, 고용 안정, 지역 균형발전, 근로조건 개선, 조직

효율성 등을 꼽았다. 87%가 직원과 노조 의견이 추진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95%가 노사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가 45.2%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다’ 20.6%, ‘매우 잘 안다’ 13.6%, ‘잘 모른다’ 13.5%, ‘전혀 모른다’ 7.2% 등으로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노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우려’ 단계를 넘어 ‘반대’로 굳어지고 있음이 한편 전남도공무원노조는 지난 16~19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송승중, 광주 북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말이 아닌 실행으로 민생 회복·사람 중심 북구 만들 것”

송승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20일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부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정체된 지역 경제와 생활행정 불편,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북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30여년간 지방행정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부의장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은 민생경제 회복, 생활이 편한 북구, 미래를 준비하는 북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주차·교통·안전 등 생활 불편 해소 위한 생활밀착 행정, AI 기반 행정 도입과 미래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북구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람이 희망이다’를 기조로 한 주민



참여형 ‘좋은세상 만들기’ 캠페인, 5·18 국립묘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험 공간 조성, 북구만의 정체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 육성 등도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송승중 부의장은 “구청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책임자”라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현장에 가고, 구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한 행정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공동체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며 “정직한 행정, 따뜻한 북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

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선정 대수

인구감소지역 20곳 국비 3억 지원…30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시범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공모에 많은 시군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여행 중 지출한 비용의 50%를 20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전국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자체당 국비 3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강진군 ‘반값여행’ 성공사례를 모델로, 지역 16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무안군 제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 공유, 사전 컨설팅, 공동 대

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체류형 관광 콘텐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역 상권 연계 소비 모델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 마련되도록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전남섬박문의 해 등 대형 관광 프로젝트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광객이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해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역 재방문을 유도하고 관광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 지자체가 최

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도민 참여형 사업 공모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올해 도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90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 사업(1000만원) 등 2개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 문화행사, 인식조사와 정책 제안 연구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전반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탈북 청년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일상, 정책 경험 등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두 사업 모두 전남도와 광주시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며, 공모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도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선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도민이 함께 소통하면서 통일을 일상 속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문인 북구청장 3선 도전 가능성에 선거판 요동

기초단체장 자격 심사 신청…“통합상황 고려해 거취 결정”

문인 북구 북구청장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자격 심사를 신청, 3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북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이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을 철회하고, 광주시당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신청했다.

앞서 문 청장은 지난해 중앙당에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신청하며 광주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며, 지난 8일 시장 선거를 위해 사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며 특별법 발의를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자 사임을 번복, 출판기념회도 연기하는 행보를 보였다.

문 청장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문 청장 측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상황을 지켜보며 거취를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청장 측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광주시장 선거가 없어진 것이



에서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기초단체장 자격심사를 신청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구청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다는 광주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장 출마에서 북구청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공인의 공언을 뒤집는 것”이라며 “말과 행동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하며, 약속을 지켰던 문인 청정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에 접수했다”며 “행정통합 논의 등 정치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병덕, 5·18 민주유공자 포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사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교육·취업·의료 등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의 폭력과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도 학살의 진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헌신한 이들의 공로는 피해 중심의 요건에 가로마쳐 제도적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공영방송 ARD 소속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이다. 힌츠페터 기사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을 촬영·보도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힌츠페터 기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행 5·18 보상법상 유공자 심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로 태우고 들어간 택시운전사 김사복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전파하는 데 현저히 기여한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신설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